



청와대 "北 도발·자극할 의도 없어" 긴장 완화 노력 지속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정봉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이날 군·경찰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관련 지시 사항에 대해 조치 중"이라며서도 "회의 개최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

시했다.

대북대화 '바늘구멍' 뚫던 중 변수 돌출...靑 '무인기 사태' 주시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첫 번째 돌출 변수에 직면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돌연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무인기가 한국 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이륙했다며 그 배후에 국군이 있다는 의심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11일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무인기 변수'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전

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화해 조치를 했으나 북한은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한 대화 신호를 거듭 보냈다.

올해는 취임 첫해의 한미·한미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포스메이커'를 권한 데 이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의 중재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무인기 문제로 남북 간 공방이 격화할 경우 그나마 모색하던 '바늘구멍 뚫기'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인기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했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이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앞서 윤석열 정권의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두고 "바보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상황 전개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전날 정부가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군

에 더해 경찰까지 합류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명의로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말을 꺼낸' 상황에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주장대로 지난해 9월 첫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묵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태도 변화의 조짐일 수 있다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김영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한국 국방부 입장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거나 "실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무시로 일관하던 기존과는 다소 다른 태도로 읽히는 표현이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군경 합동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면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특혜 의혹"李측 불법·부당 없어

차남·삼남, 거주지 부근 공익근무...장남, 부친 공저논문 내고 연구원 취임

국민의힘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지근거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데다,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자의 차남(33)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2년간 집에서 7km 떨어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했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다.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삼남(29)에 대해서도 "방배경찰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

을 한 것"이라며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간 공익요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하던지, (의혹이 사실 이) 아니라면 아들 병역 관련 자료도 모두 날같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언론 공지

를 통해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히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고 병역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갑질과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등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쌓여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보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자의 장남(35)이 국제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취임 당시 제출한 논

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경위 소속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KIEP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10월 이 연구원 부연구위원에 지명될 때 아버지인 김영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렸다.

당시 KIEP 원장과 부원장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이 후보자와 김 교수의 아

들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실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내리막으로 몰았던 조국 사태급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인물에게 다섯 차례나 공천을 준 국민의힘 역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봉 기자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공개" 조직 이원화 쟁점될 듯

법률가·非법률가 분리 구성...‘수사역량’ 명분 속 ‘제2의檢’ 탄생 우려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與일각 "어떤 형태도 안돼"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 기관으로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12일 공개된다.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 등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현재 검찰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깝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검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1~3심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능의 쏠림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12일 공개되는 법안에는 이밖에 기관별 지방·고등청의 설치 여부, '감찰총장' 명칭의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와 대통령 재가, 법률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맞춰 두 기관을 문제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에서 정부 법안이 개혁적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은 변수

다. 주된 쟁점은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다.

범여권에서는 중수청을 검찰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면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등 우수한 수사인력을 데려올 유인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황윤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해야 '감찰 카르텔' 구조를 깨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전하려면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지식이 특히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실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브 채널은 봉옥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가 출신이 주도하는 중수청 구조를 지지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작성 추정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국

무조정실은 전날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으로 설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여부도 향후 논쟁이 거세게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수청·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폐지 전에는 공소청법을 통과시키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입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잖이 제기된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유지 외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성 기자